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고도화된 심사평가정보 연계 플랫폼 ‘HIRA e-Form 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07.12

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중 하나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임...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2023.06.27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 I, 대물) 가입률이 51.8%(’22년 12월 말)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감독원 2023.07.05

금융위원회는 ’23. 7. 5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함. 이번 지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1. 6) 이후 세 번째 지정으로서, 7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함

’23.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2023.07.10

’23년 3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後) 보험회사의 K-ICS 비율은 219.0%로 ’22년 12월 말 RBC 비율(205.9%) 대비 13.1%p 상승함. ’23년 3월 말 경과조치 전(前) K-ICS 가용자본은 2백 4십 4조 9천만 원으로 RBC 가용자본(1백 3십 9조 7천만 원) 대비 1백 5조 1천만 원 증가함. ’23년 3월 말 경과...

'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금융감독원

2023.07.11

'22년 말 기준 11개 보험회사(생명보험 4, 손해보험 7)가 11개국에서 39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임. 당기 순이익은 1억 2천 3백만 달러로 전년(9천 8십만 달러) 대비 3천 1백 7십만 달러(34.9%) 증가함. '22년 말 자산은 6십 3억 3천만 달러(8조 원)로 전년 말(6십 5억 6천만 달러) 대비 2억 3천만 달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부 보험업계의 부당권유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2023.06.29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023.07.06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 6. 30)한 이후로, 작년에 이어 '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 사(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함. 자체정상화계획은 ① 지배구조, ② 핵심기능·사업...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3.07.10

금융위원회는 '23. 7. 10(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함. 이번 협의회에서는 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②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2023.06.29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함.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함

중증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보건복지부 2023.06.30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중증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밝힘. 2023년 7월부터 3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6,005건 지급

보건복지부 2023.07.02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힘.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1년간 총 6,005건...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2023.07.03

보건복지부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추계 실시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2023.07.05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보건복지부

2023.07.06

보건복지부는 7월 6일(목)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개정

손해보험협회

2023.06.29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과실 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

성별 연금 격차 해소 위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07.10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급여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남녀 간 수급률과 가입 기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뉨. 경력 단절과 함께 상당수 여성의 일자리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임. 연금제도를 통해 재생산되는 성별 격차 개선 위해 크레딧 확대와 최소 가입 기간 단축을 고려해야함

입법 자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06.22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06.27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해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확보가 곤란한 사람의 안정적

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일부를 개선하여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및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2023.07.05

자동차정비 문제 관련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서도 손해배상원칙을 공정하게 재정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로 확대하여 구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2023.07.10

현행법 제106조의 소액처리 기준인 “건당 2천 원 미만”은 1999년 기준 금액으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2023.07.10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2024년에 종결됨. 그러나 2021년 기준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빈곤가구에 해당함. 이에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2023.07.10

현행법 제66조의3에서 규정한 소액처리 기준인 “건당 1,000원 미만”은 2007년 기준 금액으로,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소액처리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고자 함